

애플페이 임박... MZ세대 정조준 현대카드, 점유율 높일까

현대카드, 신용카드 점유율 3위
19~29세 아이폰 사용자 52%
우선 서비스 통해 MZ 확보노력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 과제 여전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현대카드가 우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MZ세대의 가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출시를 시사한 애플페이가 오는 20~24일 중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카드와의 독점 계약은 파기됐지만 우선 계약을 통해 한동안은 현대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국내 주요 카드사들 또한 애플페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이다.

지난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8~29세의 아이폰 사용자는 5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삼성 갤럭시 사용자는 44%, LG스마트폰은 3%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현대카드는 '젊은 감성'을 내세워 MZ세대 확보에 속도를 냈다. 자사 플랫폼인 '현카연구소'를 포함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젊은 소비자를 정조준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또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MZ세대 확보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카드업계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점유율

은 16.0%로 8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 중 신한카드(19.6%)와 삼성카드(17.8%)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현대카드와 공동 3위를 차지한 KB국민카드(15.4%)는 업계 4위로 내려갔다.

애플페이가 이달 상용화되더라도 현대카드의 전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체크카드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오로지 '해외겸용' 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해외 결제 기술 회사의 마크가 들어가야 한다. 카드 신청 시 해외겸용을 선택하면 된다.

걸림돌로 지적받은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편차이츠를 중심으로 NFC 단말기 보급 정황이 포착

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업계에서는 NFC 단말기의 보급 수준을 1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달 신세계그룹은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사 지급결제수단인 '쓱페이'가 있어서다. 상용화를 시작해도 '애플페이 1호 사용자'로 불리던 스타벅스는 물론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한동안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유통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애플페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새 NFC 단말기 보급 및 기존 단말기 업그레이드 일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등의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간편지급결제 시장에 한 차례 지각변동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4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10명 중 3명만 수용

소득 늘고 부채 줄어도 거절 많아
정책·시기 확인 후 재신청 해봐라

#.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 결과 당행 내부 신용평가 결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연봉과 신용점수가 모두 상승한 직장인 김성훈(36·가명)씨는 최근 주거대출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주변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감면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올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은행 내부신용평가 결과 김 씨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만한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적 비교 공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각 은행별로 수용률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대출 금리는 상승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신한·KB·우리·하나은행 등)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은행연합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들은 총 102만 9112건의 금리인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31만 5771건에 대해 이자감면을 적용했다. 총 수용률은 30.6%로 상반기 24.8%와 비교해 6%포인트(p) 가량 상승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차주가 직장 변동,

자산·소득 증가, 부채 감소,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되더라도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받기 위해선 개인의 조건과 시기를 자세히 확인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은 횡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어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은행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이

어서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연봉이 올랐지만 인상률이 높지 않으면 은행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대출(예금·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정책자금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실효성 제고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은행마다 수용하는 실적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승인 요건을 더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융당국 ATS 예비인가 27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시장규제와 상장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가능하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매뉴얼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7~30일까지다.

예비인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후 4~5월 금융당국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손보사 과당경쟁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아닙니다"

금감원 Q&A

특약만 100개, 보장내용도 제한적
약관·상품설명서 꼼꼼히 확인해야

Q.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A.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통상 100개 이상의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어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구속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이 확대된 상품이 출시되었으나 사망 또는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상태 시 경찰조사 등 제한적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보험금지

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길 원하시는 경우라면 만기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구남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IRP는 IBK에서'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IBK기업은행 세제 확대 'IRP' 가입고객 이벤트

IBK기업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제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가입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IRP는 IBK에서'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 자동이체 신규 등록(자동이체기간 12개월 및 이체금액 10만원 이상) ▲ 기존 자동이체 등록고객의 이체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증액 ▲ 자기부담금 1백만원 이상 추가입금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숙박권(3명)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2147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모바일앱(App)을 통해 IRP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평생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2일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IRP를 가입한 고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IBK 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와 수수료 면제 및 경품 이벤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